

간행물관리번호

KYWA-2020-071-01



2020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contents

제1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및 개요	3
2. 추진경과 및 절차	4
3.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5
제2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7
1. 출범식	9
2. 정책발굴워크숍	11
3. 본회의	12
4. 결과보고회	13
제3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5
1. 정책영역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과정	17
2. 정책과제 구성 체계	18
3.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세부내용	19
4. 소관부처 검토의견	60
제4장 불임자료	75
1.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77
2. 2019년 정책과제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내용	81

제 1 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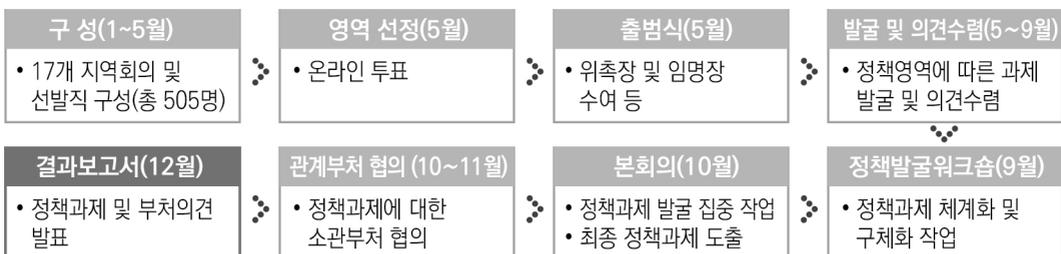
- 국제기구(UN, ICNYP)는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최고위층 정치인들의 의지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격상 권고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 형성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에 시범사업 이후 매년 개최
 -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5. 12. 22.)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분야 20개 과제 제안
 - ✓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6. 10. 27.)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 ✓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7. 11. 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 ✓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8. 11. 21.)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 12.)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 ✓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1. 26.)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 ✓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1. 11. 18.)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 ✓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2. 11. 23.)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 ✓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3. 11. 21.)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4. 11. 21.)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5. 11. 20.)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 ✓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6. 11. 24.)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7. 11. 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쳐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 ✓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8. 11. 23.)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 ✓ 제1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9. 12. 6.)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 ✓ 제1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20. 12. 4.)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2 추진경과 및 절차

추진경과

- '20. 1월 기본계획 수립
- '20. 1월 ~ 4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구성
- '20. 5. 18.~24. 영역 선정투표: '자립' 선정
- '20. 5. 29. 출범식: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등
- '20. 5월 ~ 6월 일반 청소년 의견수렴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 '20. 7월 ~ 9월 지역회의 의견수렴 및 검토
- 1차(7월), 2차(8월), 3차(9월)
- '20. 8. 1. 대표자 회의
- 실천과제 공유 및 정책과제 논의
- '20. 9월 전문가 자문단 검토
- '20. 9. 11. 정책발굴워크숍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
- '20. 10. 9. 본회의
- 의결투표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33개 세부정책과제)
- '20. 10. 16. ~22. 정책과제 선정 의결투표
- 세부 정책과제 33개 중 33개 선정
- '20.10~11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 '20.12. 4. 결과보고회

추진절차



3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 연령별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만9~15세	만16~18세	만19~24세
505명	212명 (42%)	293명 (58%)	86명 (17%)	320명 (63.4%)	99명 (19.6%)

● 지역회의별

(단위 :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5	29	28	21	26	35	22	24	4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발직
16	27	26	25	31	26	25	16	68

구성 및 역할

- 정책제안팀(30명)
 - 정부에 제안할 정책제안과제 발굴 등
- 의제기획팀(20명)
 - 청소년 여론 동향 파악, 이슈 발굴 및 구체화 작업 등
- 온라인소통팀(18명)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등
- 지역회의(437명)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공동 실천활동 전개 등

제 2 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1

출범식

개요

- 기 간: 2020. 5. 29.(금)
- 장 소: AW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총 62명 * 온라인 생중계 운영
 - 청소년위원 27명
 - 청소년지도자 및 공무원, 전문가 자문단 등 19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6명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영역 선정 결과보고
 - 위촉장 및 의장단 임명장 수여
 - 출범선언문 낭독 등
- 출범식 사진



진행 일정표

구분	시 간	세부내용
접수	15:30-16:00	참가자 등록
사전 회의	16:00-16:40	의장단 및 지역회의-선발직 대표자 회의
		지역회의 담당자 회의
출범식	17:00-17:05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7:05-17:10	개회사
	17:10-17:15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경과 보고
	17:15-17:25	지역회의 및 선발직 위원 위촉장 수여
	17:25-17:28	신임 의장단 임명
	17:28-17:30	출범선언문 낭독
	17:30-17:35	기념촬영 및 행사 폐회

2

정책발굴워크숍

개요

- 기 간: 2020. 9. 11.(금)
- 운영방법: 비대면 화상시스템
- 참석인원: 총 39명
 - 정책제안팀 청소년위원 및 시·도 지역회의 대표 청소년 26명
 - 의장단 및 청소년특별회의 OB 5명
 - 전문가 자문단 및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 4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4명
- 주요내용
 - [특강] 청소년정책과제의 예산반영 방안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정책발굴워크숍 사진



3 본회의

개요

- 기 간: 2020. 10. 9.(금)
- 운영방법: 비대면 화상시스템
- 참석인원: 총 40명
 - 정책제안팀 청소년위원 및 시·도 지역회의 대표 청소년 29명
 - 의장단 및 청소년특별회의의 OB, 청소년 전문가 7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4명
- 주요내용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최종 정책과제 도출



본회의 사진



4

결과보고회

개요

- 기 간: 2020. 12. 4.(금)
- 운영방법: 화상회의 및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결과보고회 운영
- 참석인원: 총 328명 (대면 23명, 비대면 305명)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사회자) 및 의장단 5명
 - 화상회의(청소년위원 및 지도자) 240명
 - 유튜브(일반 청소년 및 지도자) 65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8명
- 주요내용
 - 2017~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사항 발표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발표
 -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5개 분야 33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 청소년특별회의 건의문 낭독 및 제안과제 전달 등

정책과제 총괄표

구분	중과제	과제 수	수용(32개)		불수용 (1개)
			수용	부분수용	
계		33	6	26	1
취업	전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6	1	5	-
정보	청소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4	1	3	-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1	2	-
보호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5	-	5	-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	2	1	-
경제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	-	3	1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3	1	2	-
특별과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	-	5	-

진행 일정표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5:30~15:35	참석자 소개 (온라인 포함)	온라인 중계
15:35~15:39	2020 청소년특별회의 영상 상영(경과보고)	
15:39~15:42	개회사	
15:42~15:45	인사말씀(장관님)	
15:45~15:57	정책과제 보고(정책과제 이행사항 및 수용사항)	
15:57~16:01	건의문 낭독 및 제안과제 전달	
16:01~16:11	2020년 우수 청소년참여활동 안내(시상)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16:11~16:26	17개 지역회의 및 선발직 대표 소감발표	
16:26~16:30	폐회 및 기념촬영	

● 결과보고회 사진



제 3 장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1

정책영역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과정

정책영역: 자립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투표를 통해 선정(4개 후보군 중 상위 1개 영역 채택)

정책영역 선정과정

청소년 이슈 관련
현안 조사

영역 후보군
선정회의

정책영역 선정투표 및
결과보고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 활동

- 청소년 이슈 관련 현안 조사(4월, 의제기획팀)
- 정책영역 후보군 선정 자문회의(5.15.): 4개 후보군 선정
- 정책영역 선정투표(5.12.~18.): 4개 후보군 중 상위 1개 영역 선정
- 정책영역 선정결과 보고(5.29., 출범식): 정책영역 선정결과 보고
-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 활동(5월~10월)

정책과제 발굴과정

정책과제 발굴(6~7월)

- 정책제안팀 1차회의(6.19.)
 - 정책과제 1차 분류작업
- 정책제안팀 2차회의(7.18.)
 - 정책과제표 구체화 작업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검토(5~9월)

- 지역회의 의견수렴 및 검토
 - (1차)7월 (2차)8월, (3차)9월
- 전문가 자문단 검토(9월)
- 일반 청소년 의견수렴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5~6월)

정책발굴워크숍(9.11.)

- 정책과제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

정책과제 제안

최종 정책과제 선정투표(10.16.~22.)

-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결 투표 진행
- 청소년특별회의 전체위원

본회의(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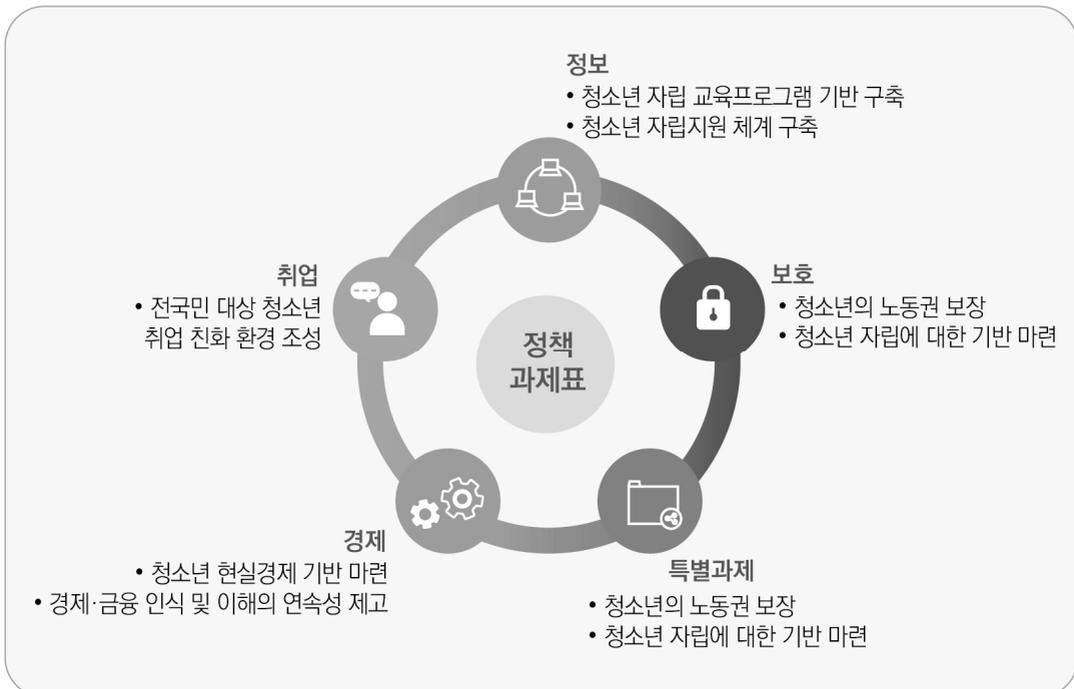
- 정책과제 발굴 집중작업
- 최종 정책과제 도출 (세부 정책과제 33개)

2 정책과제 구성 체계

정책과제 구성

- 정책영역 선정투표결과에 따라 1개 정책영역 설정
- 정책영역 내 분야별 1~2개의 정책과제 설정(총 8개 정책과제)
- 정책과제별 3~6개의 세부정책과제 설정(총 33개 세부정책과제)
- 기존 정책영역(자립) 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제안하는 특별과제 추가 제안

정책과제표



※ 총 5개 분야, 8개 정책과제, 33개 세부정책과제 제안(특별과제 포함)

3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세부내용

총 5개 분야 33개 정책과제 제안, 수용률 96.9%(수용 32, 불수용 1)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결과
1. 취업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2. 정보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시·도 교육청	부분수용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교육부	부분수용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교육부 등	수용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결과
3. 보호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⑯ 특성학교 현장실습 환경 개선	교육부	부분수용
	⑰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⑲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⑳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
	㉑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부분수용
4. 경제	㉒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㉓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㉔ '(가칭) 청소년키움통장' 개설	보건복지부	불수용
	㉕ 청소년 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㉖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㉗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여성가족부	수용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5. 특별 과제	㉙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㉚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㉛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법무부	부분수용
	㉜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㉝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 1개 기관이상이 수용시 부분수용으로 표기

1. 취업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1-1. 청소년-기관 취업 연계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고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만 열중하여 정작 본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수박 겉핥기식인 직업체험 등의 실효성 부족한 활동으로 인해 적성과 직업이 연계성을 찾는 이해가 부족한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 기회를 얻도록 해야합니다.”

제안배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습생 개개인의 적성 및 흥미에 따라 실습 장소가 배정된 경우가 52.9%에 불과함.¹⁾
- 통계청²⁾에 따르면 15세부터 24세의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1.9%로 2020년 1분기 11%, 2019년 4분기 8.5%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잡코리아에 따르면³⁾ 국내 중소기업 중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15세~29세의 청년이 고용지원을 받고 있음. 하지만 2020년 2/4분기 15세~24세 실업률은 11.9%, 25세~29세 실업률은 9.0%⁴⁾로 후기 청소년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 이수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모든 청소년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기존 단기간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승경, 201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3) 중소기업 54.6% '인력 부족하다!', 잡코리아, 2020.07.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 2017년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진로 멘토링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모니터링 결과⁵⁾ 일부 지역 이행에 그쳤음.

정책과제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 희망에 맞춰 기관과 연계 지원: 기관(멘토)-청소년(멘티)
 - 후기청소년(만18세 이상) 대상
 - 중소기업 중심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운영,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관 신청(희망 직종 및 적성 기재 후 신청)을 받아 연계
 - 분기별로 진행하며 중복 직종 2회, 최대 3회까지 가능(횟수 제한-기회의 형평성)
 - 청소년의 꿈에 맞는 컨설팅활동, 스터디 등 진행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주관 청소년 인턴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
 - 후기청소년(만18세 이상) 대상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자원 활용 인턴 및 실습 프로그램 진행
 - 정부 차원 현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에 후기청소년 의무 참여 권장
 - 상/하반기로 진행하며, 참여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정부차원의 실습 및 인턴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지급

5) 2018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8.

1. 취업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1-1-2. 교내·외 취·창업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의 목소리

- “동아리를 통해서 청소년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진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주체적인 취·창업 동아리들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때 청소년의 온전한 자립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동아리는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관련 동아리 활성화도 좋지만,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될 수 있는 취·창업 동아리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로서 운영되는 자치적인 조직체이며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결정해 주기도 함.⁶⁾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⁷⁾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태도와 부분적으로 진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 2015 교육과정⁸⁾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사항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을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할 만큼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2018년부터 2년간 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진행했음. 2년간 261개 동아리가 지원받았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참여 동아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청소년 진로 관련 동아리가 각광받으며 동아리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관련 기반이 미비하기에 본 정책을 제안함.

6)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권준근, 2011.

7)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정은·정혜원, 2019.02.

8)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정책과제

-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기관(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에 동아리연합회 구성 권고 후 공문과 고시를 통한 자율적 참여 유도
 - 지역 내 연속성 있는 교류 및 타 지역 간의 교류 활동 진행
 - 지역 사회 멘토와 교내·외 취·창업동아리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강연 및 포럼 개최 지원

-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 매년 마을공동체 및 학교, 수련시설 대상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진행
 - 공모사업 참여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유망 산업 관련 취·창업동아리에 가산점 부여
 - 공모 선정 동아리는 예산 지원 확대

1. 취업

- 1-1. 전 국민 대상 청소년 취업 친화 환경 조성
- 1-1-3. 청소년 직업 인식 개선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청소년 부당대우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은 좋지 않다.’ 사회적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습니다. 이는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통계청⁹⁾에 따르면 15세부터 24세의 2020년 2분기 실업률은 11.9%로 2020년 1분기 11%, 2019년 4분기 8.5%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증가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중 약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¹⁰⁾
-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자질로 ‘직업윤리’를 선택했음. 이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음.
-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¹¹⁾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 개선분야 중 하나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¹²⁾ 실제 ‘왜 공부 대신 일을 하는 거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져있음.

정책과제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직업윤리’부분 교육 강화
 - 직업 차별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대학 일자리센터 주관 직업 차별 교육 실시

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10) 중소기업 54.6% ‘인력 부족하다!’, 잡코리아, 2020.07.

11) 2019년 경상남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경상남도, 2019.

12) 청소년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높은 필요성 가져”, 오마이뉴스 윤성호, 2019.09.06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

-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광고 공모전 진행
(예시) 청소년 근로 모습 등을 촬영하여 편의점 가판대 등에 상영
- 각 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청소년 근로 인식 개선 홍보물(템플릿 등) 배포
- 학부모 대상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교육 진행

2. 정보

2-1. 청소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2-1-1.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강화(#모델 탐색)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매우 다양함에 반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진로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기점으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적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든 선택지 내에서 선택해야 해서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고, 희망하는 선택지가 있더라도 정원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서 진로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안배경

- 진로교육법 제4조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재의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는 초중고 재학생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통계를 찾기 어려움.
- 세종시 교육청의 동네방네프로젝트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음. 동네방네프로젝트의 경우 불특정연령대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1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개설된 방과후 형식의 강좌를 한 학교가 아닌 관내 모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기주도적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예산 계획까지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 대학은 기존의 학교 주관 진로 강좌와는 달리 시 단위로 대학 학과 체험 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음. 다만, 꿈의 대학은 직업보다 대학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경기도 교육청-‘경기 꿈의 대학’ 운영개요〉

구 분	주요내용
기 간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각 8주간 운영
시 간	주중(월요일~금요일) 19시~21시, 주말(토요일) 10시~12시에 수강
차 시	강좌 당 주1회 2차시(8주차는 3차시) 8주, 총 17차시(학기당) 운영
대 상	고등학생 전(全)학년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무학년제 운영)
비 용	무료수강 원칙(실험실습비 또는 재료비의 경우 자비 부담 발생 가능)
수 강	한 학기 1인 3강좌까지 수강 가능
강 사	기관이 인증한 석사 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기 록	✓ 별도 평가는 없으며, 강좌 당 70% 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

정책과제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 기존의 학교 단위의 진로프로그램에서 시군구 단위의 진로프로그램으로 확대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 만 13세~18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로프로그램 계획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 교육지원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직접적인 체험 위주의 진로프로그램 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의 직업 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정보

2-1. 청소년 자립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 2-1-2. 학교 내 자립교육 프로그램 조성

청소년의 목소리

-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 청소년은 단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을 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짊어지게 될 사회에 필요한 정보,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자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로 및 부동산 계약 등에 있어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자립교육 대상자 제한 조치
 -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교육을 하고 있음. 110분이 6차시로 나뉘져 있으며, 보호종료 아동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임. 하지만 보호종료 아동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은 들을 수 없음.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립 생활교육실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 또한 대상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에게만 해당함. 아울러 정작 일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자립교육은 진행하지 않음.

- 자립에 대한 불안감

연령대	내 용	%
15~29세 (가구수[가구]: 875)	전혀 자립하지 못함	6.9
	별로 자립하지 못함	15.4
	보통	22.2
	약간 자립	23.0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32.5
	모르겠음	0.1
	합 계	100.0

- 위 표는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를 나타낸 통계표임.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은 사람 이외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875개의 가구 중 67.6%인 591개 가구임. 10명 중 6명이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 자립 정보 부족으로 생긴 피해

- 2018년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함.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임.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함. 2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음. 이를 통해 청소년 대상 청소년 근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2019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원룸 1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A씨가 대학생 120여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벌어짐¹³⁾. 이와 유사한 대학생 대상 부동산 계약사기는 매년 꾸준히 일어남.

● 기존 교육의 비효율성

- 교육부가 2019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운영 현황(2018.3월~2019.2월)에 의하면 1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학교급별 평균 교육시행 시간은 고등학교 5.7시간(총 1,813시간), 초등학교 3.9시간(총 2,381시간), 중학교 3시간(총 1,142시간) 순으로 노동인권 교육 수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지루함 및 재미없음(38.6%), (2순위)교육내용의 반복(27.5%)등을 응답하여, 교육내용에 변화가 필요함.

13) 대학생 원룸 보증금 39억원, 외제차·도박·해외여행에 탕진한 임대업자, 중앙일보 한영혜, 2019.11.07.

정책과제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 자립 프로그램 기획하기 전,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자립 교육을 진행한 후, 자립 프로그램 기획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구조로 진행
- 자립 프로그램 직접 기획
 - ‘미래의 나는 어떻게 자립했을까?’라는 얘기를 담아, 계획 플랜과 미래 모습 상상하며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키워주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자립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립 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파악을 위해 청소년, 사회인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설문조사 진행 기관 : 교육부
(예시) 부동산 계약, 소비자 보호, 청소년 근로계약, 세금, 청년 정책, 국가 건강검진 등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나누어 분야별 필수정보를 교육할 프로그램 조성, 이론보단 실례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
 - * 교육 프로그램 조성 기관: 교육부
 - * 교육 프로그램 자문 기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 실효성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교사의 교육 이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 지양, 담당 강사의 방문 강의 시행
- 학기 말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후 등 학사운영이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에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교육 진행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부처에 대한 홍보 필요

2. 정보

2-2.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2-1. 청소년 자립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청소년의 목소리

-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뉴스가 간혹 보도됩니다. 주위에 청소년들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를 할 때 사용자와 어떠한 체결을 해야 하는지 등 청소년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미비
 -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34.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42%로 청소년 알바에 대한 부당 대우가 많았고, 특히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의 다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봉사활동신청 및 확인 홈페이지의 경우도 다양하게 나뉘어 있음. 또한 신청방법과 인터페이스 나이스 연계 방법까지 달라(1365, 두볼, VMS 등) 이에 대한 혼동이 있음.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통합된 플랫폼이 존재 하지 않음.
- 청소년활동 / 교육 /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보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음. (시청/교육청/각 지역 청소년센터 홈페이지/각 지역 청소년관련 기관)
- e-청소년은 현재 봉사활동 및 활동적 정책에 대해서만 다루지고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_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1)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2016)'를 보면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21%임. 즉, 10명 중 일부인 2.1명만 자료를 제공받은 것을 알 수 있음.

응답자유형별	2016	
	아니다	그렇다
전체	79	21
성별		
남자	78.3	21.7
여자	79.9	20.1
학교유형별		
초등학교	74.7	25.3
중학교	78.9	21.1
고등학교		
전체	82.4	17.6
일반계고	82.2	17.8
특성화계고	83.1	16.9
지역규모별		
대도시	76.4	23.6
중소도시	80.6	19.4
읍면지역	81.8	18.2

가족유형별		
양부모가정	79	21
한부모가정	82.5	17.5
조손가정	71	29
기타	71.7	28.3
학업성적별		
상	75.9	24.1
중	80.1	19.9
하	81.5	18.5
경제적수준별		
상	77.1	22.9
중	81.2	18.8
하	81.6	18.4

응답자유형별(1)	응답자유형별(2)	2019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	소계	52.8	36.4	8.6	2.2
성별	남자	56.0	33.6	8.3	2.1
	여자	49.4	39.3	9.0	2.3
학교급	초등학교	51.1	37.0	10.2	1.7
	중학교	54.9	36.3	7.3	1.4
	고등학교	52.5	35.8	8.3	3.4
고교유형	일반계고	51.9	35.7	8.6	3.7
	특성화계고	54.8	36.1	7.2	1.9
지역규모	대도시	52.0	36.9	8.9	2.2
	중소도시	54.9	35.5	8.1	1.6
	읍면지역	47.4	38.0	9.9	4.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52.6	36.7	8.5	2.2
	한부모가정	57.1	31.0	9.7	2.3
	조손가정	50.2	34.0	12.5	3.4
	기타	41.4	49.7	8.8	0.0
학업성적	상	50.5	36.2	10.5	2.8
	중	51.6	38.4	8.0	2.0
	하	58.6	32.9	6.7	1.8
경제적 수준	상	50.4	37.9	9.6	2.2
	중	56.1	34.7	7.0	2.2
	하	56.1	32.9	8.5	2.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_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에서 ‘참여기구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는 응답률을 보면 52%가 ‘듣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였음. 10명 중에 5.2명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9 전국 청소년 지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20,648명 중 7,535명, 즉 10명 중 3명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음.

구분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전체
	전체평균 (5점)	전혀 알지 못한다 (1점)	잘 알지 못한다 (2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점)	잘 알고 있다 (4점)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전국	2.77	2,038명 (9.9%)	5,497명 (26.6%)	9,354명 (45.3%)	2,796명 (13.5%)	963명 (4.7%)	20,648명 (1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2019 전국 청소년 지표 기초조사 보고서」

정책과제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초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정책 및 서비스의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법률들(「노동법」 등)의 내용이 수정, 변경됐을 때 포털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Q&A 시스템을 운영함.
- 청소년이 근로계약과 같은 청소년 노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근로계약서의 개념과 필요성, 최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의 계산법 등)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 청소년에게 친근한 플랫폼(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한 자립 지원 팸플릿을 제작함. 자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청소년이 갖는 노동권의 내용과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 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팸플릿을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배포함.
- 또한 중학교(13-15세)를 입학하는 시기에 청소년증과 함께 청소년 권리 팸플릿을 나눠주어 청소년으로서 필요한 정보(권리, 봉사활동)들을 포함한 지원 팸플릿을 제작하여 스스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알지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사항이다.'라는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함.

3. 보호

3-1.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3-1-1. 청소년 노동권 교육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지, 사용자는 무엇을 지켜줘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근로 청소년과 그를 고용하는 사용자 모두 노동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낮은 노동권 교육 비율과 열악한 청소년 노동 환경
 -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8%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중 35.3%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 26.4%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 기관 등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비율은 10%에 그치고,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39.8%에 불과하고 또한 근로 청소년과 같은 경우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음.
 -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 직원의 사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만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본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근로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피해 사실이 있어도 당장의 생계유지,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성희롱과 같은 경우 증거 수집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피해 사실에 대응하는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 특성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

연번	학교명	학생명	발생일시	사고 내역	조치사항
1	D공고	홍○○	2013.08.26	타일 샘플절단기 롤러에 의한 뼈에 금, 인대 늘어남	회사에서 공상처리 급여, 치료비 지급
2	K공고	박○○	2013.08.30	트럭에서 하차 시 팔 골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 휴무기간 동안 급여 지급
3	I고	이○○	2013.10.14	포장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상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4	B고	서○○	2013.10.04	기계 협착에 의한 손가락 골절	회사에서 치료비 부담
5	H고	김○○	2013.12.24	원자재 운반 시 손가락 절상	산재처리 치료비 전액 보상
6	K고	조○○	2013.12.15	청소 중 손가락 골절상	산재처리 추가 비용 회사에서 부담
7	S고	신○○	2014.01.21	출장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보상

- 위와 같이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도 만 17살인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에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사고도 있음. 특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함.

정책과제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교육 확대(사용자, 청소년)
 - 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 진행
 - 교육: 지방자치단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동 (혹은 여성가족부 단일)
 - 세부 방안: “교육이수서” 발급; 교육이수서가 있어야 노동자(기존 청소년 한정 대상에서 오히려 청소년의 고용을 비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 적용) 고용 가능
 - 상담 기관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확대
 - 기타 사항: 청소년에게도 요구되는 노동권 관련 교육 시 해당 부서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

- 현재 노동권과 관련된 교육은 학교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소년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교육 자료 제작
 - 교육 : 지방자치단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협업이 필요함.
 - 기타 사항 : “교육이수서” 발급; 교육이수서가 있어야 노동 가능
(근로 기간 14일 이상, 근로 시간 10시간 이상에 해당함,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함).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 청소년 근로 환경 중 안전사고가 잦은 편에 속하는 고등학교 현장 실습은, 인명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어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포괄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
 - 자료제작: 고용노동부 / 배포: 교육부
- 현장 실습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담당 교사 및 현장 책임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와 유사)

3. 보호

3-1.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3-1-2. 청소년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노동 환경에 있지만, 근로 중에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신고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쉽게 이러한 피해들을 상담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최근 현장실습 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 관리자 배치 문제
 -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실습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발생 원인으로 안전 관리자의 부재 및 관리의 부실 문제가 대두됨(2017년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사망사고, 2014년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 중 37.6% 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함.
 -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3세~24세)의 31%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소년 3명 중 한명은 먼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받는 등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 중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전국 4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을 진행 중임.
 -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면, 현장 면담 후 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하며, 중재 후에도 권리

-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은 지난해 5만여 건으로 2018년 3만282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함.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 중임.

정책과제

⑩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는지, 현장실습 환경이 적절한 안전 기준을 통과했는지 등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정기적으로 협조하여 공동 조사
- 국가 차원의 일자리 개선 및 안전관리자 배치 관리 강화와 확대
 - 기존 실습현장 안전관리자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방안과 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한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 민간, 공기업 등 사업체에서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 관리자가 각 노동 현장에 배치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또한, 관리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확대하여 각 사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⑪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 근로계약서 작성 모니터링
 -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지, 근로계약서를 근로 청소년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을 시군구에서 일정 주기로(월 1회 수준) 모니터링을 진행함.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보호 센터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원활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산하의 지역센터를 두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정보 획득의 접근성을 위해 '학교 및 꿈드림센터'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연계함. 각 학교별로 마련된 '위클래스'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간 협업 인프라 구축으로 '위클래스'의 경우 문제상황 발생 시 근로보호센터로 이첩하여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토록 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경우 관련 간행물 및 청소년 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위클래스에 비치토록 함.
- (현재 노동 유관기관과의 소통은 있는 상태이나, 매뉴얼 혹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다소 소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중앙을 포함하여 총 4곳의 지부를 가지고 있음.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지원의 효력이 떨어짐. 이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추가 설치 혹은 지역 청소년센터 등과의 협업 인프라를 구성하여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해 보다 밀접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생겨난 신조어로, 청소년에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생계형 근로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근로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연계성 강화 및 프로그램 검사 제공
 -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기분장애에 대해 조기에 발견 및 치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각 학교, 나아가 기관 등에 속해있는 청소년과 연계.
 - 연 1회 이상 전체 학생 대상 심리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 관련 정신 건강을 검진하고, 위험 수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전문적 상담을 진행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토록 노력함.

3. 보호

3-2.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2-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추산 약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출, 성범죄 등 비행과 학업 중단 및 가정폭력 등’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자퇴 전후로 유일한 연계 프로그램인 ‘학업숙려제’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후 어떠한 기관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안배경

- 2019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약 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이중 6%인 약 3,000명의 학생들이 비행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추산 7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대신하여 “보건 및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꿈드림센터의 이용률은 겨우 4만 8천여명 뿐임.

정책과제

⑱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 자퇴 이후 ‘정원 외 관리대상’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학교 차원에서 지원(정원 외 관리 대상 정보 보관 기간 중).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의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이 센터 내에서 학업 영역부터 생활 내 필수적인 영역까지 지원하여 금전적 열악함을 보완토록 함.

3. 보호

3-2. 청소년 자립에 대한 기반 마련

3-2-2.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나이일뿐더러,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지원해주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 “현재 충남에서도 해마다 100명 정도의 18세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되어 시설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소액의 자립지원금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배경

- 보육원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함.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자립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거친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실제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자란 청년들조차도 취업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다양한 법률로 만 18세는 아직 보호를 받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핸드폰 개통, 아르바이트, 등 사회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함.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경제활동 및 활동을 못하는 상황임.
-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만 18살 이상이 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게 지급됨.

| 표 | 시도별 1인당 자립정착금 지원액(2015년)

단위:만원 / 자료:보건복지부(20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500	500	300	500	400	300	500	500	5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	500	500	300	300	500	500	500	

정책과제

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보호종료청소년은 아동 보호 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자립지원금을 한 번에 수령함. 청소년들은 시설에서의 퇴소가 곧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의 규칙 상실과 무절제한 소비 등의 모습이 많이 보이며 범죄에 노출이 높아짐.
- 이를 방지하기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시기의 청소년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종료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공동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지원.

㉕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 보호 시설 종료 청소년들의 '18세 퇴소' 기준은 현재 청소년 스스로 사회에 발을 내딛고 생계를 유지하며, 미래를 꿈꾸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함.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자립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시설청소년의 보호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음.
- 청소년보호법과 다양한 법률로 만 18세는 아직 보호를 받을 청소년이라는 점과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경제활동 및 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퇴소 청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높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4. 경제

4-1.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1-1. 후기 청소년 주거 안전성 확대

청소년의 목소리

-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기숙사와 함께 자취방을 알아보았으나, 대학생이 혼자 보증금과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후기 청소년들이 이러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

보증 대상자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7천만원

● 후기 청소년 전월세 자금 마련의 어려움

-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에 따르면 1인 청년 전세 평균은 6,476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은 987만원으로 나타남. 대부분은 부모님께 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목돈을 구함. 이마저도 힘든 일부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이 적은 고시원에서 주거를 시작하기도 함.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해보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가장 큰 벽이라고 토로함.

정책과제

②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용 지원정책의 기준 완화와 확대지원
 - 보증 대상자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연령 하향
 - 해당 정책으로 주거지를 구하는 후기 청소년들이 최소 전세 8000만원 이상의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
(예시) 보증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 기준)

③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 관공서 및 중개업 등에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후기 청소년 및 청년 복지 정책자료 보급
- (후기) 청소년 거주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노력 지속

4. 경제

4-1. 청소년 현실경제 기반 마련
4-1-2. 청소년 소득보장 정책 마련

청소년의 목소리

-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보면서 비슷한 정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청소년 복지정책, 특히 청소년 수당 정책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기에 소득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소득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혜택을 제공해준다면 청소년들의 근로생활에서 부당한 일도 줄어들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안배경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단기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만15세~39세이하
------	---

정부24_청년저축계좌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일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19)씨는 수험생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노동조건조차 감내해야만 했음. A씨는 분명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공고를 보고 집 근처

편의점에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러 가니 점주는 당연하다는 듯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고, 오히려 점주는 “학생 같은 지원자는 많다”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내비치기도 하였음. 당시 치열한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에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최저시급보다 1000원가량 낮은 임금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음¹⁴⁾.

● 불합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정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 응답자의 10명 중 6명(60.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함.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수능 직후인 11월 말부터 1월까지 고3 학생들의 상담 전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며 “고용 조건과는 다른 급여 및 근무시간, 허위 구직광고, 사장의 폭언·욕설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고 설명함¹⁵⁾.



●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

- 청소년수당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임.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영규는 지난해 말 500명의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도민 64.6%가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했고 또, 60.6%의 도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음.
- 도민들이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찬성했다는 뜻으로, 현 시대에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배움의 영역에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을 동의한 것임.¹⁶⁾

14)15) 알바 시장 물리는 수험생… ‘나쁜 노동계약’으로 사회 첫 발, 세계일보 이강진, 2019.11.24.

16)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수당’, 전북일보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2020.02.19.

정책과제

㉔ ‘(가칭) 청소년키움통장’ 개설

- 근로소득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 소득활동이 가능한 모든 청소년(만 15~24세) 신청 가능 (2회 이상 신청 불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중복 참여 가능
- 신청 시 근로계약서 및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제출
- 신청 청소년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㉕ 청소년 수당 지급

- 여성가족부가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소년수당 예산 확보
- 만 9~18세 모든 청소년에게 현금성 청소년 수당 지급 (월 10만원, 연 120만원 내외)
- 신청 시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으로 신분 확인
- 청소년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 (추가 의견) · 청소년 수당 불가능 시
- 문화누리카드 만 9~18세 모든 청소년 보급 (상반기 각각 10만원)
- 바우처 종류 및 지원범위 확대
(스포츠바우처_헬스나 수영 등 운동센터, 국민행복카드_생리대, 장난감바우처_장난감 백화점, 푸드스탬프_식료품점 등의 바우처 종류 확대 지원)

4. 경제

4-2. 경제·금융 인식 및 이해의 연속성 제고

4-2-1. 청소년 금융(실물경제) 의무교육 실시

청소년의 목소리

-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실물경제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를 모르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은 순간 돈을 번다는 생각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청장년층은 경제 의식이 부족한 상태로 주식, 펀드, 부동산에 선불리 투자해 돈을 잃고, 노년층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전 세대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으로 그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배경

- 고교생들의 낮은 경제 이해력
 - 조사대상 고교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제교육의 최후 공급자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부가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¹⁷⁾
-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청소년들의 잘못된 경제의식 관련 인터뷰¹⁸⁾
 - “10대 학생들 중에도 불법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광고를 통해 접하거나 친구에게 소개받는 식으로 사이트를 알게 돼서 빠지는 경우다.”
 - “꽂머니(공돈)를 만원씩 주는 식으로 학생들을 낚는다.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작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수백만원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불법사이트이다 보니 이겼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훌쩍이나 마리오라고 부르는 사행성 도박도 많다.”
 - “불법도박 문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보다 불법도박을 더 문제라고 보고 학생들을 단속할 정도다. 실제로도 그렇다. 불법도박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17)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 한국경제교육학회 박문규, 2002.12.

18) “불법도박에 빠진 학생들, 학폭으로 연결”, 조선비즈 이종현, 이다비, 2020.01.10.

이어진다. 불법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메꿔야 하다보니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면 경제활동이 필수적인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불법도박을 하거나 소액대출을 쓰다가 제3금융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문제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15년 16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급증했음.

● 우리나라 성인의 낮은 금융 이해도 및 금융 지식의 필요성

-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해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음. 연령대별 이해도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남.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사람들의 금융 이해도는 58점인 데 반해 250만원 이상 420만원 이하는 63점이며 그 이상의 소득자는 66점 정도임. 20대와 60~70대가 금융사기에 가장 취약하고 투자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낮은 금융 이해력에 기인함.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며,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됨.¹⁹⁾

● 금융교육을 청소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²⁰⁾

- “국·영·수 과목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부추기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그 전에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 중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는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함.
-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금융교육’을 청소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음. 이들은 금융문맹이 과잉부채, 파산 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임. 영국은 공립학교 11~16세 필수과목인 ‘시민성’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고, 미국은 17개 주에서 금융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했음.

19) 돈의 속성, 김승호, 스노우폭스북스

20) “어려서부터 돈·투자 공부해야 한다”...금융교육 활성화 돼야, 시사오늘 박진영, 2020.03.02.

●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융교육의 개선방향(현황)

-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20.4).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함. 중학생은 자유학년제,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소 2시간 이상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 또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매주1회, 2시간 실시)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임. 특히 수학(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국어(문학 등), 역사 등 사회 외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임.²¹⁾

↓ 정책과제

㉔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 1시간 '금융' 교육 실시
- 평가 방식은 P/F(Pass/Fail)평가로 진행하여 학습 부담감 해소
- 경제 용어 학습 등을 통한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은행, 금융권 은퇴자들에게 영어 과목의 원어민 교사 같은 '금융' 과목 전문교사 지원자격 제공
- 교내 모의 투자대회 등의 경제, 금융 대회 개최 권장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 수준별 금융교육자료가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며,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의무교육화

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 EBS를 통해 온라인 금융 교육 자료 배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은행 혹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연 2회, 회당 2시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교와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보호기관으로 확대

㉖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 금융교육을 접해보지 못한 대학생 또한 금융이해력이 현저하게 낮음.

21) 중·고교생 최소 2시간 금융교육 받는다, 이데일리 전선형, 2020.04.30.

- 은행 혹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 강의 실시
(현재 많은 대학교의 학생증이 체크카드로 개설되므로 같은 은행과 협력할 것을 권장)
- 대학교 내 금융 교양과목 개설 권장
- 각 금융권 내 대학생 금융서포터즈 확대 선발
- 대학생 금융서포터즈는 학교 밖 청소년, 사회배려계층,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활동 실시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5. 특별과제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1-1.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의 일탈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며, 재비행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62회에서도 언급된,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제안배경

- 뉴질랜드에서는 5단계로 나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은 청소년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음.



-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교화프로그램 예산확충 직후인 2009년부터 매년 청소년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 선도목적 제도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2012년 4월부터 확대 시행²²⁾되고 있지만, 소년범 중 전과자 비율이 2017년 33%²³⁾, 2018년 33.7%²⁴⁾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²⁵⁾. 때문에 최대한의 일탈 청소년을 확실하게 교화시킨 후 일상으로 복귀시켜 재범, 소년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한 단계별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함.

22)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권해수, 2018

23) 2019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9

24) 2018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8

2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권해수, 2018

정책과제

- ㉨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을 청소년 범죄 담당 경찰관으로 전환
 - 처벌보다는 교화에 집중
 - 범죄 발생 징후 포착 시 예방 활동 진행
 - 담당 인력 충원을 통한 1인 담당 학교 수 단계적 하향
(예시) 1인 10개교(현행) → 1인 5개교 → 1인 3개교

- ㉩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 피해자-가해자 중재 협의 프로그램 도입
 -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
 -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중재자 배석
 - 피해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
 - 피해자 측에서는 원하는 처벌 수위 의견 피력,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어린 사과 진행
 - 민간 투자형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목적
 - 민간에서 투자하고, 정부가 성과에 따라 투자자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
 -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 도모

5. 특별과제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1-2. 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일종의 범죄예고입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리되어 처벌 시 벌금 1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2019) 결과를 보면 스토킹 피해비용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범죄중 스토킹이 높고, 주위에도 이러한 문제를 겪은 친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책이 시급성이 높습니다.”

제안배경

- 학교실태조사(2019,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폭행(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스토킹은 학교폭력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피해유형임.

〈 학생 천 명당 응답 건수 〉									〈 피해유형별 비중 〉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17년 1차	'18년 1차	'19년 1차	증감 (건)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17년 1차	'18년 1차	'19년 1차	증감 (%p)
언어폭력	13.6	9.4	6.8	6.2	6.3	8.7	8.1	-0.6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따돌림	6.6	4.6	3.6	3.3	3.1	4.3	5.3	1.0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스토킹	3.7	3.0	2.6	2.0	2.3	3.0	2.0	-1.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사이버 괴롭힘	3.6	2.5	1.9	1.7	1.8	2.7	2.0	-0.7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4.7	3.1	2.4	2.2	2.2	2.5	2.0	-0.5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4.0	2.2	1.5	1.2	1.2	1.6	1.4	-0.2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성추행·성폭행	1.3	1.0	0.9	0.8	0.9	1.3	0.9	-0.4	강제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강제심부름	2.4	1.3	0.9	0.8	0.7	1.0	1.1	0.1	성추행·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제시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의 구성 중 심층프로그램(문제 유형 중심)을 보면 비교적 피해유형 비중이 높은 신체·물리,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러나 이 4가지의 문제유형과 비슷한

피해유형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울림 프로그램(학생용)의 구성

구분	기본프로그램 (역량 중심)	심층프로그램 (문제 유형 중심)	교과연계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4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역량)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인식대처 • (학교급) 초저, 초고, 중,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유형) 신체·물리,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 (학교급) 초저, 초고, 중,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2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역량)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인터넷윤리의식, 자기조절, 감정조절, 사이버상 갈등관리, 사이버폭력인식대처 • (학교급) 초 등, 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역량) 사이버언어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영상유포 • (학교급) 초 등, 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 개발 예정) • (고등학교) 국어, 윤리, 통합사회 (※ 개발 예정)

- 만 18~69세 성인 남녀 1,500명(남성 760명 50.7%, 여성 740명 49.3%)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젠더 기반 폭력 근절 및 성차별 해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 국민 대다수는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²⁶⁾

-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98.8%),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94.5%), '스토킹 방지법 제정'(94.4%) 순으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입법 동의 비중이 높았음. 특히 현행법상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함. '스토킹 방지법 제정'은 94.4%(여성 98.1%, 남성 90.9%)가 동의하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동의)

-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은 아직도 벌금 1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지난 2020년 4월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킹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음.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05.14.~20(7일간) '21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설문 조사

해당 청원은 12,807명이 동의했으며,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면서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였음. 조씨는 "그간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 조치 벌금 5만원으로 사실상 훈방 조치했음.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스스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키 처벌법이 너무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고 말했음. 이어 "스토키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음. 현행법상 스토키는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항목으로 처벌함. (법칙금 8만원) 이 국민청원 외에도 2020년 08월 16일 기준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스토키' 관련 청원은 337건으로 스토키를 언급하면서 범죄처벌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스토키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도 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책과제

㉓ 스토키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벌금 최대 500만원, 징역 최대 7년으로 처벌 강화
- 필요시 영구한 접근금지명령 및 전자발찌 착용
- 피해자에게 '합리적 두려움'을 가지는 행위를 스토키 범죄로 규정해 광범위한 스토키 범죄유형에 대해 처벌 가능하도록 함.
- 스토키 신고 접수 시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 스토키 조사 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
-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필요 시 경제적 지원(휴대폰 번호이동, 주소 이전 등) 제공

㉔ 학교폭력 내 스토키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내 심층프로그램에서 '스토키'에 대한 내용 다룰 것
- 학교폭력으로 스토키 신고 접수 시 확실한 가해자 처벌 및 가해자 피해자 분리
- 스토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

5. 특별과제

5-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방향
5-1-3. SNS(익명채팅 등) 상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의 목소리

- “최근 N번방 사건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트위터를 가입해 ‘조건만남’, ‘일탈계’ 등을 검색해보았는데 성적인 게시물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검색) 가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범위가 폭넓고 피해규모도 크기에, 조기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배경

- 청소년 범죄를 다룬 기사²⁷⁾

아이들은 제 발로 텔레그램에 걸어 들어간 게 아니다.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은 악랄했다. 가족, 학교, 친구, 개인정보가 총동원된 전방위 협박을 거쳐 아이들은 꼼짝달짝 못하는 노예가 됐다. 범행은 주로 트위터에서 이뤄졌다. n번방 창시자인 ‘갓갓’은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 트위터에 사적인 사진을 올린 아이들을 타깃으로 했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으니 링크에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조사에 응하라’는 문자를 먼저 보냈다. 답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덧붙였다. 아이들이 신상정보를 내놓으면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얼굴사진을 요구했다. 이어 얼굴을 미끼로 전신, 가슴, 상의 탈의 사진으로 요구는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멈칫하면, 그 사이 신상정보를 털어 겁을 줬다.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대답을 독촉하고, 숨 쉴 틈 없이 압박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상담 지원 4,787건, 삭제 지원 28,879건, 수사, 법률지원 203건, 의료 지원 52건으로 전체 33,921건을 지원했음.(2019.08.12.기준) 이처럼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규모를 줄이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기도 함. 따라서 접근성을 확대하여 보편화할 수 있다면 보다 성범죄 대응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임.

27) [N번방 추적기-변외편] 노예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2020.03.11.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사업목적	여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위기 상담과 이를 통한 관련 지원시설 연계 등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피해자 전화, 내방, 방문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 여성폭력 피해자 사이버상담(채팅, 이메일, 게시판) • 긴급피난시설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를 통한 특화지원 강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등 연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의체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정책과제

㉓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 카카오톡 등 오픈채팅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배너 광고 노출 의무화
- 배너 광고 클릭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으로 연결
- 오픈채팅 신고 목록에 '디지털성범죄' 신설 권장
-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된 오픈채팅은 경찰청으로 접수
- 트위터 내 기존 배너 광고 의무화 대상 해시태그 확대
(예시) '일탈계' 해시태그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불건전한 해시태그
- 기존 광고 문구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성소수자 모든 피해자들을 언급하도록 수정
(예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 → '성폭력', '성적으로 부당한 상황'
-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 가능하다는 내용 언급하도록 수정

4 소관부처 검토의견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청소년비즈쿨·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식의 맞춤형 멘토 - 멘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취지에 맞게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겠음. 	여성가족부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는 ‘환경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방향 연구’ 등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턴 및 실습지원 확대는 유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겠음. 	여성가족부
③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센터 주관의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타 동아리와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시·도센터에서 특정 주제 동아리를 대상으로 교류 활동, 멘토링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운영기간에서 요청 시 감사비, 물품 등에 한해 지원 가능 	여성가족부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 경기 교육청 등은 불수용, 강원·대구·부산·서울·광주 교육청 등은 부분수용, 대구·경남 교육청은 수용 등으로 검토 현재 지역 내 창업체험센터나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중기부 등의 비즈쿨사업과 연계하여 취창업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시행 및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취·창업 동아리에 가산점 부여’는 고려해보아야 할 듯함. 현재 교육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인증기관을 확대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정확한 기준이나 선정시 참고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 검토 필요 	시·도 교육청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노동의 가치와 직업 윤리'(2019) 같은 직업윤리와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직업윤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교과과정 개선 등 이나 일자리센터 등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나가겠음. 	여성가족부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 (광고, 교육)	부분 수용 (수용1/ 불수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으로 노동인권 인식 제고('18~) - 카드뉴스, SNS 이벤트, 유튜브 영상 게재 등을 통해 인식 개선 홍보('19~) - 지자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홍보물(아르바이트 길잡이) 배포('18~)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근로 관련 인식개선에 대한 문제는 관련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확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관 인사담당자나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권리구제·홍보·교육 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노동 웹드라마 제작('오늘부터 1일'), 유튜브 송출, ▲ 알바천국 온라인 홍보, ▲ 카드뉴스·안내책자 배포('슬기로운노동생활'),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에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홍보책자 배부 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부분수용, 교육청 의견은 강원·경남·경기·대구·대전교육청 등은 부분수용, 광주 교육청은 수용 등으로 검토함 • 교육(지원)청 주관 진로직업체험 확대(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하여 설립·운영 중인 231개 진로체험지원센터(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 및 매칭하고 있음. 설립 운 	교육부 시·도 교육청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영 유형에 따라 구분되지만, 교육(지원)청 직영 및 위탁 운영과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운영 모두 학교 단위의 진로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범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음.</p> <p>-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신산업 관련 진로체험 기관 발굴 등에 힘쓰고 있으며,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진로교육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하겠음</p>	
<p>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부분수용, 교육청 의견 수렴 결과 강원·경남·경기·대구·대전교육청 등은 부분수용, 광주·서울 교육청은 수용, 대구교육청은 불수용 등으로 검토함 •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시·도에서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조를 시·도에 요청하였음 * 부산(영화, 해양, 증강현실), 대구(섬유, 한방), 울산(미래자동차), 경기(지역연계) 등 8개 시도에서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는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교육부-중소기업중앙회, '15.10.21) 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 요구에 맞는 진로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추진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겠음 	<p>교육부, 시·도 교육청</p>
<p>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교육과 유사한 '생애설계' 등의 내용은 기술·가정, 사회, 진로와 직업 등 관련 교과 수업에 이미 다루고 지고 있음 -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에 '진로교육'과 '노동인권'이 포함되어 '자립교육'과 유사한 생애설계 등의 내용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편성·운영 되고 있어 기시행 중임 - 다만, 제안하신 '자립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 	<p>교육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영역과 활동 등을 제시하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p>	
⑩ 청소년 자립 필수 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수용	<p>※ 청소년 근로계약 (노동인권 교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노동인에 관한 내용을 보다 강조하였고,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인권교육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교육 •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참고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20.9~ , 10개 차시) - 초·중·고 노동교육의 공감대 형성과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콘텐츠 개발 등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정('21년) •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시도교육청-교육부, 부처간 정책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예정 <p>*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침해 등 학생대상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서울, 울산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중</p>	교육부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는 대표 홈페이지·'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정보 및 관련 법령·청소년 노동관련 필요한 서식 등을 상시 서비스 중 - 청소년 자립 지원은 청소년의 사회진출시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 등은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 	고용노동부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부분 수용 (부분수용 1 / 불수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청소년증에 직접 1388, 청소년활동정보포털 등을 인쇄하여 청소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음 (부분수용) - 향후 청소년 권리 팸플릿을 제작하여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청소년 및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와 청소년이 갖는 노동권의 내용과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관심있는 청소년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불수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 상담·권리구제 지원 중 	
<p>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 홍보('18~) - 사업장 대상 홍보를 위한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추진('18~) - 근로 청소년 및 사업주가 손쉽게 작성하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제공('19~)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게시하고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근로조건알리미'가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홍보·안내를 진행 중 	<p>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p>
<p>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p>	<p>부분수용 (수용 1 / 불수용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 운영('20~) ※ 코로나19로 교육 운영 어려움 발생, 향후 적극 운영 예정 • 사업주·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 근로자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교육을 이수해야 노동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중으로,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중고등학생 등 무료로 사이버교육 가능 	<p>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⑮ 현장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영(연중) ※ (대상/주요내용) 직업계고 3학년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12시간 현장실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배포('20.3월) 	교육부
⑯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운영 점검 및 현장실습 피해학생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행('20.10월~'21.2월)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 참여 	교육부
⑰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부분 수용 (수용 1/ 불수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운영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18~) 학교별 모바일 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근로청소년에게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0~) 시군구에서 월 1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독권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점검하고 있으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인노무사를 통해 1:1 심층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근로조건알리미'가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보호 법령 등을 홍보·지도 중에 있음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대는 신중 검토 필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현재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의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 연 1회 이상 전체 학생 대상 심리검사 실시는 예산과 운영인력 상 불가능하며, 현재도 심리자원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①9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퇴 이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청소년(자퇴, 퇴학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가 연계되어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로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자립·건강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20년 전용공간 조성 및 급식 지원 신규 실시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가능(소득기준 등 충족 시) 	여성가족부
<p>②0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p>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조사, 자립수준평가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중 - 아울러 매년 발간되는 자립정보복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내 중 	보건복지부
<p>②1 보호시설 퇴소 연령 상향</p>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의 만기 퇴소 기준은 국제 통용기준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상의 연령 기준에 따라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이하의 학업완수, 직업교육 이수, 질병이나 그 외 사유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20대 중후반까지 보호기간 연장 • 퇴소연령 상향은 안정적인 자립에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일시보호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장기화로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감소*', '의존적 시설 생활로 경제관념 부족, 주변과의 연락 두절, 고립' 등의 자립 지체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시설 퇴소 연령 상향화는 신중할 필요 *시설 아동 평균 재원기간 6.8년(2017년 기준), 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 중 원가정 복귀율 15.3%에 불과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18년 보호종료아동 FGI 인터뷰 중 〉</p> <p style="text-align: center;">삼푸, 휴지같은 작은 것 사본적도 없고 무조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남들같이 해결해 본 적이 없고 주어진 대로만 했거든요</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미성년 보호아동의 경우 보호연장 의무화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2조 4호의 기타 연장 사유 적용 등으로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19년 기준 연장기간 만료로 보호종료되는 아동 비율은 49.3%로 보호종료 아동 2명 중 1명은 보호 연장 후 보호종결 	
<p>㉔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대상자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은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대출하는 경우 보호자 등에 의한 악용우려가 존재 • 청년전월세 상품을 이용한 후기청소년들이 7,000만 원 이상 전세대출 이용시에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필요한 분들은 청년전월세 상품(대출한도 7,000만원)과 일반 전세대출 (청년전월세를 포함하여 총 2억원 한도)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p>금융위원회</p>
<p>㉕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및 중개업 등에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후기 청소년 및 청년 복지 정책자료 보급(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전·월세자금대출 안내책자를 은행창구에 비치하여 홍보 중으로, 필요 시 관공서 및 중개업 등과 공유 가능* * 전국 관공서, 중개업 등에 안내책자 보급은 예산상 제약으로 곤란 • (후기) 청소년 거주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노력 지속(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 19세~39세*인 사람, 대학(원)생 등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21년 9천호 공급 예정) * 만 18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은 입주 가능하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입주불가능 	<p>국토교통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②④ '(가칭) 청소년키움 통장' 개설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상 지급대상 확대는 신중검토 필요 (불수용) - 현재에도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만15세~24세)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로 동 법률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동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중복 수혜가 가능한 별도 사업 신설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별도의 검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②⑤ 청소년 수당 지급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지급 방식·대상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며, '21년 관련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가겠음 	여성가족부
②⑥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 정규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사회, 실과, 중학교 사회, 기술·가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실용경제 등의 과목에 용돈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재무계획 설계, 금융상품 등의 내용이 이미 다루어지고 있음 -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에 '경제·금융교육'이 포함되어 관련내용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편성·운영 되고 있어 기시행 중임 - 다만, 모든 초, 중, 고에서 주1시간 금융 교육 실시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연구 및 전문가,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교육부
②⑦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및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자료 활용 가능 • 현재 KB국민카드 협력으로 금융소비자교육 추진 중 •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교와 학교밖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보호기관으로 확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해나가겠음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과 협력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강의 실시(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들은 ‘1사1교 금융교육’을 통해 학교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금감원에서 대학신입생 금융특강,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금융특강 등 대학생 대상 금융강의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금융 교양과목 개설 권장(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에서 대학에서 희망하는 경우 강사와 교재 등을 제공하여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음 •각 금융권 내 대학생 금융서포터즈 확대 선발 및 선순환체계 구축(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해 정책당국이 선발규모와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강제할 수 없음 	<p>금융위원회</p>
<p>㉙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 프로그램) 도입</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전담경찰관을 청소년 범죄 담당 경찰관으로 전환 <처벌보다는 교화에 집중>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서는 경찰 단계 청소년 선도 정책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뿐 아니라, 소년범·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 단계 청소년 선도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심사위원회 : 경미 소년범에 대해 즉결심판·훈방 등 맞춤형 사건처리를 통해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 ▶ 선도프로그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소년범의 재범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 전문가참여제 : 소년범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선도에 활용, 재범 방지효과 제고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발생 징후 포착 시 예방 활동 진행>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에서는 각종 사회적 이슈들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그중 청소년 관련 범죄 징후가 확인될 시 적시성 있는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담당 인력 충원을 통한 1인 담당 학교 수 단계적 하향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학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학생 수는 20.4% 	<p>경찰청</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줄어들어, 실질적인 치안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 초·중·고등학교 현황〉 출처 : 교육통계연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 : '12년 11,360개교 → '20년 11,710개교 (3% 증가) ▶ 학생 수 : '12년 672만명 → '20년 534만명 (20.4% 감소) </div> <p>-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총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치안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p>	
<p>㉔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프로그램 도입</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해자 중재 협의 프로그램 도입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찰에서는 피해회복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여 피해자, 가해자에게 신청·동의를 받아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 중임 - 경찰 선도프로그램 표준모델(희망동행교실)에도 회복적 사법 이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효과적 회복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그 외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중재자 배석' 및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처벌 수위 의견 피력 부분'은 법무부 등 사법기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 민간 투자형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마련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 중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치유 선도프로그램(마음나눔교실)은 청소년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 -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 담당자, 경찰 간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단,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은 경찰에서 대상자를 연계하고, 경찰 예산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민간 투자방식과는 성격이 맞지 않음 ※ 민간투자형 시스템 도입은 여가부 등 유관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p>경찰청</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㉑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최대 500만원, 징역 최대 7년으로 처벌 강화, 피해자에게 ‘합리적 두려움’을 가지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광범위한 스토킹 범죄유형에 대해 처벌 가능하도록 함(수용, 다만 법정형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정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입법 추진중 • 필요시 영구한 접근금지명령 및 전자발찌 착용(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로서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도입 추진 - 다만, 영구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부착 등 도입은 비례성 원칙 등에 비추어 면밀한 검토 필요 • 스토킹 조사 시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하고 수사담당자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이 교육될 수 있도록 추진 •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임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필요 시 경제적 지원(휴대폰 번호이동, 주소 이전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은 여가부 주관* 사항임 * 2018.2.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등 참조 	<p>법무부</p>
<p>㉒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심층프로그램에서 ‘스토킹’ 관련 내용 포함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 스토킹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룰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범죄를 학습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신 어울림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스토킹 예방교육이 가능한 ‘어울림’ 프로그램 : △(‘어울림’ 기본)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어울림’ 심층)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어울림’ 기 	<p>교육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p>본)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사이버어울림’ 심층) 사이버 언어폭력·사이버 영상유포·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스토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가해학생 조치 및 가·피해학생 분리 강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스토킹’은 학교폭력 한 유형이므로 ‘스토킹’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조치 등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스토킹’ 가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초기대응 요령을 마련하고 적극 안내하겠음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21.12월)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조치 실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 위(Wee)클래스(7,631개소), 교육(지원)청 위(Wee)센터(233개소)에 전문상담교사 4,032명, 전문상담사 3,494명 배치하여 상담·지원(‘20.4월 기준) 	
<p>㉓ SNS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p>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에서의 광고 노출 의무화(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SNS(트위터)에서는 특정 키워드 검색시 여성 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배너가 노출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 향후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정보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 하겠음 - 참고로, 모든 SNS 사업자에 대한 광고배너 노출 의무화는 기업의 경제활동(광고료 등 수익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로서 관련 사업자, 관계기관 등 검토가 필요함 ● 오픈채팅 신고 목록에 ‘디지털 성범죄’ 신설 권장(수용) *기시행 	<p>여성가족부</p>

정책과제	수용 여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SNS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 바, 여기에는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신고기능이 포함되어있음 • 트위터 내 기존 배너광고 확대 및 문구 정비(수용) *기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트위터 내 특정 키워드 검색시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배너가 노출되며 주요 키워드를 해시태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음 - 기존 광고 문구 정비(처벌조항 포함 등)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 협력회의를 통해 검토 추진 예정 	

제4장

붙임자료

1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정책영역 발굴 및 결과

- 정책영역 :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특별과제
- 정책과제 발굴 결과 : 총 28개 과제 중 25개 과제 수용(89.3%)

분 야	정책 과제	과제 수	수용		불수용
			수용	부분 수용	
	계	28	9	16	3
경제활동	청소년 경제생활 지원	2	1	1	-
	청소년 경제 인식 제고 기반 확대	2	-	1	1
안 전	청소년 생활 안전	4	1	2	1
	청소년 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 체계 확대	2	1	1	-
양성평등	교내 양성평등 내실화	3	-	3	-
	양성평등 인식 개선	3	1	2	-
인 권	청소년 인권 보장 내실화	4	-	4	-
	청소년 여가권 보장	3	1	2	-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2	2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권리 확대	2	1	-	1
특별과제	청소년 위상 강화	1	1	-	-

이행현황 모니터링 개요

●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추진 과정

'19.2월~3월	2019 청소년특별회의 기본계획 수립
'19.5.12.~5.18.	정책의제 영역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 - 정책의제 영역선정: 경제활동, 안전,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
'19.5.23.	출범식 : 청소년위원 위촉, 출범선언문 낭독 등
'19.8.2.~8.3.	예비회의 - 정책과제 분류 및 체계화 작업 등
'19.8월~9월	정책과제 관련 일반청소년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 검토
'19.9.20.~9.21.	본회의 - 의결투표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28개 세부정책과제)
'19.10.11.~10.21.	정책과제 선정 의결투표 - 세부 정책과제 28개 중 28개 선정
'19.10월~11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19.12.6.	결과보고회 : 28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19.12.13.	평가회의
'20.10월	2020년 기준 정책과제 이행여부 모니터링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행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25개 과제 중 23개 과제 이행(92.0%)

분야	정책과제	계	이행		미이행	불수용
			이행	부분이행		
계		28	14	9	2	3
경제활동	청소년 경제생활 지원	2	2	-	-	-
	청소년 경제 인식 제고 기반 확대	2	1	-	-	1
안전	청소년 생활 안전	4	3	-	-	1
	청소년 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 체계 확대	2	2	-	-	-
양성평등	교내 양성평등 내실화	3	2	1	-	-
	양성평등 인식 개선	3	2	1	-	-
인권	청소년 인권 보장 내실화	4	-	3	1	-
	청소년 여가권 보장	3	1	1	1	-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2	1	1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권리 확대	2	-	1	-	1
특별과제	청소년 위상 강화	1	-	1	-	-

● 이행현황 모니터링 세부결과표

분야	정책과제	소관 부처	수용 결과	이행 여부
1. 경제 활동	① 청소년 기본생활 수당 지원(교통, 문화, 여가 등)	여가부	부분수용	이행
	②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용부 여가부	수용	이행
	③ 청소년 생활 경제 및 금융 교육 의무화	교육부	불수용	-
	④ 『경제배움e』(온라인 경제 교육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	기재부	부분수용	이행
2. 안전	⑤ 생활안전지원 교육과정 및 의무교육 강화	교육부 식약처	부분수용	이행
	⑥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등록 연령 확대 및 안전제도 강화	경찰청	불수용	-
2. 안전	⑦ wee 이동식 쉼터(버스) 운영 지원 확대	고용부 여가부	부분수용	이행
	⑧ 1학교 1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상담자 상담윤리 강화	교육부	수용	이행
	⑨ 학교폭력,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제도 강화	고용부 여가부	수용	이행
	⑩ 청소년 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	여가부	부분수용	이행
3. 양성평등	⑪ 교복의 선택권 보장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⑫ 교내 학생 주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⑬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 의무 시행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⑭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양성평등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수용	부분이행
	⑮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고용부 여가부	부분수용	이행
	⑯ 표준국어사전의 단어 정의 개선(성차별적 단어 개선)	문체부	부분수용	이행
4. 인권	⑰ 국민청원 내 청소년 카테고리 추가	BH	부분수용	미이행
	⑱ 가치 '청소년 인권 119'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존 소통채널 확대	여가부 인권위	부분수용	부분이행
	⑲ 청소년 인권 주간 운영	여가부 인권위	부분수용	부분이행
	⑳ 국가 인권위원회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개선	인권위	부분수용	부분이행
	㉑ 청소년시설 내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	여가부	수용	부분이행
	㉒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관광 지원	문체부 국토부	부분수용	이행
	㉓ 청소년 관광 특화 마을 조성	문체부	부분수용	미이행

분야	정책과제	소관 부처	수용 결과	이행 여부
5. 학교밖 청소년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력 확대	여가부	수용	이행
	㉕ 중앙정부 차원 체계 확립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	여가부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㉖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멘토단 확대	여가부	수용	부분이행
	㉗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습지원 재구조화와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불수용	-
6. 특별과제	㉘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포함	여가부	수용	부분이행

2

2019년 정책과제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내용

1

경제활동

1-1. 청소년 경제생활 지원

1-1-1. 청소년 기본 경제권 보장

제안배경

- 직접적인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18%를 제외한 청소년 대부분은, 보호자의 지원 하에 생활권을 영위함. 그렇기에 보호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본에 대한 청소년의 가용 범위가 달라지며, 이는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평등권이 심히 위배할 가능성이 있음.²⁸⁾
- 직접적인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15세~24세) 중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율은 전체의 53.2%로 노동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법적으로 정당한 노동 행위를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²⁹⁾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정책과제

- ① 청소년 기본생활 수당 지원(교통, 문화, 여가 등)
 - 정책적으로 경제 주체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기본적 문화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수당 지원
- ②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노동 환경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근로기준법 교육, 실용적 노동 컨설팅 지원 등의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28) 남화성, 청소년 임파워먼트 인식 척도 개발 연구, 2016, 한국청소년학회

29) 최상진,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모니터링 결과

- ① 청소년 기본생활 수당 지원(교통, 문화, 여가 등)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통·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 지자체·교육청별 교통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원 사업자유학기제 연계 특별지원사업(청소년 행복카드)
- ②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확대 운영,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시간 연장(야간 상담 서비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및 맞춤형 상담 지원



| 그림 1 |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홍보배너

1-2. 청소년 경제 인식 제고 기반 확대

1-2-1.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경제 및 금융 교육 활성화

제안배경

- 2010년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였지만, 현재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3금융권, 금융상품 범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청소년 생활 경제교육 매뉴얼이 없음.
- 또한, 우리 사회의 급진적인 경제 동향에 적응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치, 낭비, 카드빚, 신용불량, 쇼핑중독, 개인파산,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현대의 청소년은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경제생활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됨.³⁰⁾

정책과제

- ③ 청소년 생활 경제 및 금융 교육 의무화
 - 실생활에서 필요한 금리, 금융상품, 부동산 등에 대한 경제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한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실시
- ④ 『경제배움e』(온라인 경제 교육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제배움e’(온라인 경제 교육 시스템)의 홍보 확대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

모니터링 결과

- ③ 청소년 생활 경제 및 금융 교육 의무화 <교육부, 불수용>

30) 김은숙·정신섭, 청소년 경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017, 송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④ 『경제배움e』 (온라인 경제 교육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 <기획재정부, 이행>

-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경제 교육 내실화 및 홍보 활성화
 - 지속적인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 * 경제로 세상 읽기(경제놀이터), 보고서, 자료집 등
 - 기획재정부 SNS채널 활용 카드뉴스 형태로 경제배움e 자료 배포



[그림 2]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관련 SNS 게시물

2-1. 청소년 생활 안전

2-1-1. 청소년 생활안전지원 확대

제안배경

- 학사일정 상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방침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학차량에 대한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도로교통법 제51조, 52조, 53조)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안전 규정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인 아동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법령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정책과제

- ⑤ 생활안전지원 교육과정 및 의무교육 강화
 - VR 기계를 응용한 재난 안전 교육 실시 (예: 이동형 체험 버스 운행)
 - 전문 인력을 통한 의약품 안전교육 강화 및 활성화
 - 안전 교육 방침 재정립
- ⑥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등록 연령 확대 및 안전제도 강화
 -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등록 대상 및 안전 규정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
 - 교통법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운행 규제

모니터링 결과

- ⑤ 생활안전지원 교육과정 및 의무교육 강화 <교육부, 식약처, 이행>
 - 의약품안전사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진행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연계
 - * 경제로 세상 읽기(경제놀이터), 보고서, 자료집 등
 - 안전체험관 확충 및 VR 활용 재난안전교육 실시
 - 지자체별 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소방청 협업 VR 활용 가상현실 재난안전체험차량 운영



경남도, 전국 첫 '가상현실 재난안전체험차량' 운영한다

기사입력 2020.04.27. 오전 10:56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서울=연합뉴스) 경남도가 4차 산업시대 흐름에 맞춰 전국 처음으로 '가상현실(VR) 전용 재난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그림 3 | VR 활용 재난안전체험차량 운영 관련 기사(연합뉴스, 2020.4.27.)

- ⑥ 아동청소년 이용 차량 등록 연령 확대 및 안전제도 강화 <경찰청, 불수용>

2-1-2. 청소년 정서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

제안배경

- 2018년도 4월 기준 초등학교의 wee 클래스 설치율은 39.2%,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81.8%임. 더불어 초등학교 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율은 15.4%, 중학교는 40.6%, 고등학교는 45.4%로³¹⁾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제도 확립 및 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 도내 학생 2천2명(중학생 1천명·고등학생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경기 교육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고민 상담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42.5%) 가운데 61.5%는 ‘상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 외에 ‘비밀보장이 걱정돼서’(13%), ‘상담 방법을 몰라서’(7.6%), ‘상담교사가 없어서’(5.1%) 등으로 응답함.³²⁾ 이렇듯 학교 내 상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정책과제

- ⑦ wee 이동식 쉼터(버스) 운영 지원 확대
 - 이동식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음악·미술 심리치료 등) 제공
- ⑧ 1학교 1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상담자 상담윤리 강화
 - 1학교 1전문상담인력 배치 의무화
 -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윤리 교육 강화 및 의무화

모니터링 결과

- ⑦ wee 이동식 쉼터(버스) 운영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일부 지자체 wee 이동식 버스 쉼터 사업 시행 또는 운영 계획 중
 - 경기도 김포시, 전라남도 등

31) 김마선,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39.2% 불과, 부산일보, 2018.10.0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1001000332>

32) 백미혜, 교사와 상담 부담감 느끼는 학생들 친구에게 고민 상담, 경기신문, 2018.07.22.,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915>

⑧ 1학교 1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상담자 상담윤리 강화 <교육부, 이행>

-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
 - 최근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로 전문상담인력 배치교 수 증가
2021년 공립 중등 임용시험 사전예고 전문상담교사 모집인원 증가
-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전문상담교사 상담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지자체·교육청별 신규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찾아가는 신규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진행

찾아가는 신규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 이한영 기자 | © 승인 2020.06.23 17:1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찾아가는 신규 전문상담교사 컨설팅을 시작한다.

23일부터 대전매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까지 총 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의 현장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담당 장학사와 Wee센터 실장 등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올해 신규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를 방문해 Wee클래스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한다.

| 그림 4 | 신규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관련 기사(충청일보, 2020.6.23.)

2-2. 청소년 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 체계 확대

2-2-1. 청소년 안전 인프라 확대

제안배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는 특정 처분에만 해당함. 학교 폭력 가해의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의 주변 환경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 이수는 필수적임.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교육부)’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프로그램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가해·피해 대상자 따라 구분되어있음. 학교폭력 프로그램의 대상 구분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사후대처가 가능할 것임.
- 집을 떠나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매년 2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쉼터는 130여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업무 부담률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청소년쉼터의 예산삭감(정부 지원 예산 10% 삭감)으로 인해 위기 청소년지원 및 시설보수, 쉼터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³³⁾
- 위기 청소년들은 견딜 수 없는 경제적 빈곤을 안고 있고, 이에 청소년들은 생계형 범법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이들은 생활비 해결을 위해 가출 후 음식점, PC방,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편, 10대 가출 여성의 4명 중 1명 이상은 성을 상품화하는 원조교제, 조건만남, 성매매를 경험하기도 함.³⁴⁾

정책과제

⑨ 학교폭력,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제도 강화

-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의무화
- 학교폭력 프로그램 유형별 세분화 가이드라인 배포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보장
-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및 징계 강화
-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신종 성범죄(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법률 마련

33) 서유정, 청소년 쉼터 아이들 울리는 예산 삭감 “밥값마저...”, MBC, 2018.01.19.

34) 윤양숙·조성심·주석진,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생태체계적 관점에서-, 2014,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⑩ 청소년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

- 청소년 쉼터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기관 내 위기 청소년 인턴채용제도 제도화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 정책화

모니터링 결과

⑨ 학교폭력, 성범죄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제도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행>

- 학교폭력 관련 제도 시행 중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 신종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2020.5.19.)
 - *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예정(2020.11.20.)
 -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⑩ 청소년 쉼터 및 긴급지원 안전망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청소년쉼터 및 인력 확충
 - 지자체별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설치 확대
 - 청소년쉼터 인력(야간보호 상담원, 거리상담 요원 등) 지속적 확충

3-1. 교내 양성평등 내실화

3-1-1. 학교 내 양성평등 구현

제안배경

- 교복의 선택권 침해
 - 아동복 사이즈와 다를 바 없는 슬림핏 교복들에 문제가 제기되며 여학생용 교복 개선 문제가 청와대 청원이나 언론 보도 등에 다수 등장함.
 - 남녀차별개선위 조사 결과 여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4,036개 중·고교 가운데 규정상 여학생이 치마 교복만 입도록 하고 있는 학교는 54%인 2,181개임.
-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양성평등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또한 교내에서 발생하는 양성평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학생자치기구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함.
-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과제

- ⑪ 교복의 선택권 보장
 - 속이 비치는 재질 및 아동복 사이즈 등 불편한 여성셔츠 개선 또는 기존 남성셔츠 보급으로 교복의 선택권 보장
 - 교복바지와 교복치마 선택권 보장
- ⑫ 교내 학생 주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교내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⑬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 의무 시행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입교원 대상 직무연수, 과목별 연수, 교장(감) 자격연수, 승진관리자 연수 등과 같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적 추가
 - 외부강사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모니터링 결과

⑪ 교복의 선택권 보장 <교육부, 이행>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및 시행
 - 복장 예시규정 삭제
 - 학교 내 교복선정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 및 의견 개진 근거규정 마련

⑫ 교내 학생 주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교육부, 부분이행>

- 시·도 교육청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노력
 - 성평등위원회 발족 운영, 성평등 지표 개발 등
- 학생대표 자치기구(학생회) 등을 통한 양성평등 캠페인 기획 및 운영

⑬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 의무 시행 <교육부, 이행>

- 교원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시·도교육청별 성평등위원회가 발족을 통해 교내 성평등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음

두발·복장 등 학칙 기재사항 삭제...학교 갈등 심화

교원 83% 반대 불구 개정
교총 "학교 자율 보장하라"

정은수 기자 jsn@kha.or.kr | 등록 2020.02.25 23:20:0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림 5| 복장 예시규정 삭제 관련 기사
(한국교육신문, 2020.2.25.)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 1기 '성평등위원회' 발족...'성평등 지표'도 개발

기사인력 2020-09-10 15:56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평등 교육환경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성평등위원회를 꾸리고 '성 주류화'를 반영한 조직 혁신과 성차별 성취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공공정책 입안 추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다양성을 증시하고 양성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성평등위원회에는 초·중·고 교원, 성교육·성폭력 유관기관 전문가, 여성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13명과 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참여한다. 조대 위원장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는다.



|그림 6| 성평등위원회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20.9.10.)

3-2. 양성평등 인식 개선

3-2-1. 양성평등 활동 활성화

제안배경

- 청소년 행사의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
 -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주 관람층이며,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자리임.
 - 따라서 이러한 행사에서 양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뚜렷한 성 인지 감수성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것이라 판단됨.
-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매개체의 필요성
 - 현재, 양성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시 여겨지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 따라서 교육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양성평등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다면 이는 양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됨.

정책과제

- ⑭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양성평등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관련 체험 부스 개설 및 운영
 -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및 강연 실시
- ⑮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 교육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양성평등 공모전 개최
 -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 다양한 분야(웹툰, 연극, 로고송 등)의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모니터링 결과

- ⑭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양성평등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양성평등 관련 부스 운영단체 선정
 - 코로나19로 인해 12월로 개최 순연
 -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부스 운영단체 선정

⑮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2020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성평등 의식 제고 영역 선정
 - 성별 대립과 갈등 문제 주체적 해결 및 포용적 주체 성장 지원
7개 프로그램 선정
- 시·도교육청 및 청소년기관 연계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 웹툰, 글짓기, UCC 등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 실시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한 세상 말하는 대로 공모전 실시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9.07 21:23

| 신청기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8월 31일부터 성평등한 친화적 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시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성평등한 세상, 말하는대로」 주제로 컷 만화, 웹툰, 나홀로 성평등한 노래부르기, 움직이는 짧은 영상 만들기로 응모 할 수 있다.

| 그림 7 | 양성평등 공모전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20.9.10.)

3-2-2. 성차별적 단어 개선

제안배경

- 현재 많은 성차별적인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표준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단어가 있음. 현재 약 92개 정도의 성차별적인 단어가 있으며 개선되어있지 않음.³⁵⁾ 이러한 단어와 단어의 내용부터 고쳐나감으로써 성차별적 단어사용이 근절된 양성평등사회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함.

* 국어사전 성차별성 주요결과(성차별적 단어)³⁶⁾

연번	보기 문항	빈도	전체 단어 수(77개) 대비 빈도 수
1	성차별성/비하가 포함된 단어	17(18.5%)	2.2%
2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어 성별 고정관념 조장	20(21.7%)	2.5%
3	여성성/남성성 강조	35(38.1%)	4.5%
4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고정관념을 조장	5(5.4%)	0.6%
5	여성의 성적대상화	6(6.5%)	0.8%
6	기타	9(9.8%)	1.2%
합계		92	11.8%

정책과제

⑩ 표준국어사전의 단어 정의 개선

- 표준국어사전의 뜻풀이 내 성차별적 의미 수정(알기닥, 세탁부, 댄서 등)
- 남성에 비해 유독 여성을 강조하고 있는 직업 단어 개선(여군, 여경 등)
- 양성평등의 걸림돌의 소지를 제공하는 여성 지칭 특정단어 개선(처녀, 색시 등)

모니터링 결과

⑩ 표준국어사전의 단어 정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이행>

- 표준국어대사전 성차별적 뜻풀이, 용례 지속적 삭제 및 수정 진행
 - 낙태 → 임신중절, 자매결연 → 상호협약 등

35) 강종훈, “시대착오적인 국어사전...성차별 표현 많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2042300005>

36)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보도자료)시대착오적인 국어사전 속 뜻풀이와 예문들...양평원, ‘국어사전의 성차별성’이슈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8.11.22.

4

인권

4-1. 청소년 인권 보장 내실화

4-1-1. 청소년 인권 소통 채널 다양화

제안배경

- 2016년, 2015년, 2014년도 국가통계청 자료(청소년 인권 침해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에 따르면, 아니요 라고 답한 청소년의 수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약 25% 정도로,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적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청원항목에 ‘청소년’항목이 없어, 청소년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기 어려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함.
- 현재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는 많이 존재하지만 실상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이트의 용도에 따라 대다수가 분리되어 있음. 청소년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이트 및 관련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한 곳에 정리해놓은 (바로가기 배너를 모아놓고, 인권 관련 콘텐츠를 탑재한) 플랫폼이 필요함.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인지여부를 물었을 때 초등학교 68.8%, 중학교 41%, 고등학교 30.7%의 학생이 ‘모름’이라 답하였으며 이용경험은 초,중,고 모두 97% 이상이 없다고 답하였음.³⁷⁾

정책과제

- ⑰ 국민청원 내 청소년 카테고리 추가
 - 청소년 카테고리 속에는 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게재한 청원에 관해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
- ⑱ 가치 ‘청소년 인권 119’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존 소통채널 확대
 - 청소년인권 상담, 청소년 필요 정보 제공 가능 사이트 취합 (e청소년, 1388, 1366, 11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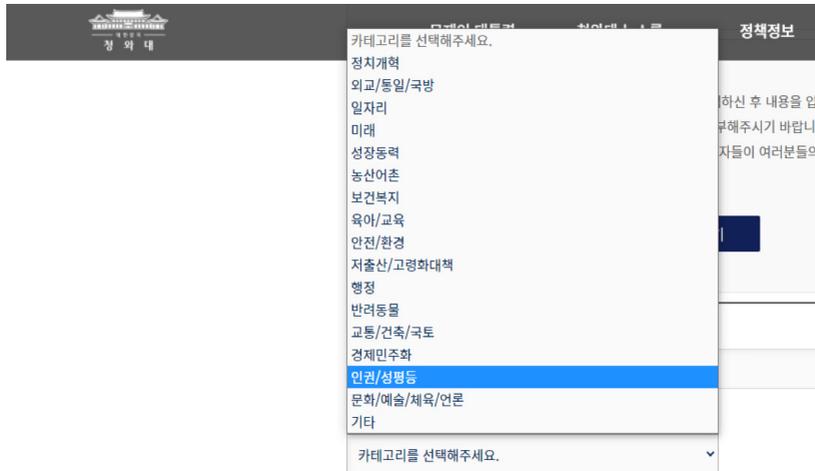
37)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2018

- 기존 상담전화 외 문자메시지·SNS·카카오톡·사이버 상담 등 소통채널 확대 운영
- 청소년인권 영상 콘텐츠 탑재 (전문가들의 토론, 연극, 사례 등)
- 청소년인권 관련 질문 / 전문가 답변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등)
-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인권 관련 이슈 온라인 토론방 개설

모니터링 결과

⑰ 국민청원 내 청소년 카테고리 추가 <대통령 비서실, 미이행>

- 국민청원 내 청소년 카테고리 미반영
 - 인권/성평등, 일자리, 보건복지 등 17개 카테고리로 운영 중



| 그림 8 | 청와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⑱ 가칭 '청소년 인권 119'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존 소통채널 확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부분이행>

- 청소년 상담 채널 확대 운영
 - 117 :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채팅상담
 - 1388 : 전화, 문자,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모바일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영상채널 개설 및 운영
 - 슬기로운 인권생활, 인권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게재



| 그림 9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그림 10 | 국가인권위원회 영상 채널

4-1-2. 청소년 인권 의식 개선

제안배경

-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로써, 청소년도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식은 낮은 편임.
 - 아동 및 청소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은(1년에 1회 이상) '연령차별'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28.3%)', '성차별(25.0%)',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3.0%)' 순으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연령차별'의 경우 또래보다는 성인으로부터의 차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³⁸⁾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인권팀이 일반 청소년 91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의 날 행사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청소년의 수가 전체의 94.5%로 대부분을 차지함.
- 아동 유투버(일명 보람튜브 사건) 논란, 아동광고 선정성 논란 등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 속 청소년 인권침해가 심각함. 그에 따라 청소년인권 모니터링단의 사이버 상 활동이 요구됨.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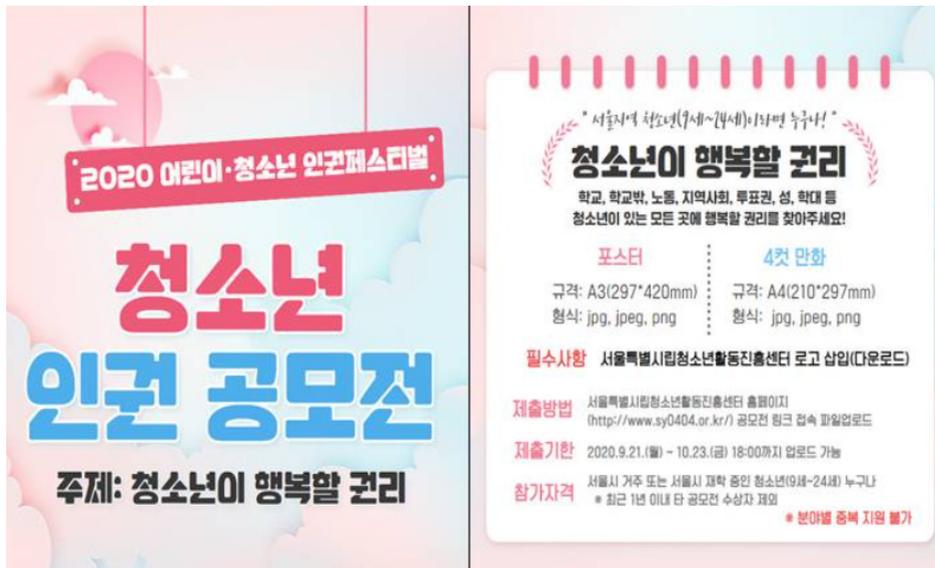
- ① 청소년 인권 주간 운영
 - 국제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포함한 주간을 '청소년 인권 주간'으로 명명
 - 청소년 인권 관련 행사, 체험형 교육, 우수사례 시상 등 개최
 - 교사 및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대상 인권 집중교육 실시
- ② 국가 인권위원회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개선
 - 매년 단일 주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년 인권실태에 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개편
 - 온라인 청소년 인권침해 규제 모니터링단 추가 운영 권장

3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모니터링 결과

① 청소년 인권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부분이행>

- 별도의 청소년 인권 주간 미운영
 - 5월 '청소년의 달', '어린이 주간', 12월 '인권주간' 등과 병행하여 다양한 청소년 인권행사 진행
- 청소년 인권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한 청소년 인권 증진 및 권익 향상 도모
 - 지자체별 청소년 인권페스티벌 및 인권 관련 공모전 시행



| 그림 11 | 청소년 인권 관련 홍보자료

② 국가 인권위원회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부분이행>

-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단일 주제 활동 지속
 -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 단일 공동 주제 활동 진행
-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단 활동 모집 지역 세분화
 - 모집 지역 세분화를 통한 아동인권 실태 점검 내실화 및 확대
 - * 경상→경북/경남, 전라→전북/전남

4-2. 청소년 여가권 보장

4-2-1. 청소년시설 이용환경 개선

제안배경

-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88.0%)과 청소년수련관(65.0%)일 뿐 더러, 청소년문화의집은 257개소, 청소년수련관은 18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그러나 문화의 집을 예로 들면, 257개소 중 대부분인 196개소가 건립 10년이 넘어 노후된 시설이 많이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 트렌드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문화의집 공간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적절한 장비 부족(39개소)과 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31개소)이 주를 이뤘음. 또한 문화의집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비 및 자료 노후화(38.7%), 방음시설 부족(28.3%), 공간 부족(27.4%), 시설 부족(27.4%) 등이 있었음.
- 이를 통해 현재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의 여가를 제대로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정책과제

- ① 청소년시설 내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
 - 장비 교체 및 구입, 공간 확충, 인력 총원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개선(리모델링 등) 시 청소년자문단 구성을 통한 의견 반영

모니터링 결과

- ① 청소년시설 내 여가활동 친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청소년자문단 역할 수행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
 - 장비 교체 및 구입, 공간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음

4-2-2. 청소년 관광 지원

제안배경

- 2017년 기준 13~24세 청소년 여가시간³⁹⁾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TV 시청], [휴식활동] 순으로 활용되었음. 그러나 13~23세 청소년들이 앞으로 시간적 및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을 국내외여행이나 캠핑 등 관광활동 (61.0%)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⁴⁰⁾.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누리는 여가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수학여행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⁴¹⁾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장과 대인관계, 자아수용, 자율성 등 심리적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수학여행' 중 여가활동과 주도적 체험활동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체험하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심리적인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정책과제

- ②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관광 지원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을 통한 청소년 추천 관광지 안내
 - 청소년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예시: 코레일 '내일로')
- ③ 청소년 관광 특화 마을 조성
 - 청소년 관광 특화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고루 갖춘 여행지구 조성
 - '공정여행(Fair Travel)'에서 착안, 청소년들이 적절한 가격에 여행지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지역에 온전히 돌아가게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숙박공간 제공

39) 통계청, 「사회조사」, 2017

40) 여성가족부·통계청, 「청소년 통계」

41) 고동우 외 4명, 수학여행의 심리적 효과, 2009, 대한경영학회

모니터링 결과

㉔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관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이행>

-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체험여행 가이드북 제공
 - 청소년을 위한 여행코스 및 테마 관광 안내
-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관광 지원
 - 한국철도(코레일) : 수험생을 위한 패스N패스 상품 출시, 기차 할인 혜택 제공



| 그림 12 | 청소년 관광 지원 관련 홍보자료

㉕ 청소년 관광 특화 마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미이행>

5

학교밖청소년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5-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확대

제안배경

- 꿈드림 실무자의 인력 총원과 안정적 고용 필요
 - 2018년 기준 전국 꿈드림 206곳에 주어진 총 예산은 250억 원으로 센터별로 나누면 시·도 센터 2억2995원, 시·군·구 센터 8050만~1억5771만원이며, 센터장, 팀장 등을 제외하고 2~3명 밖에 실무자를 고용하지 못함. 2~3명이 학생 상담, 고용프로그램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 홍보, 행정처리 등을 다 해야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성윤숙 연구원은 “꿈드림 직원은 너무 근무 사정이 열악하고 고용 형태도 대부분 계약직”이라며 “학교밖 청소년이 악순환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말했음.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시급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
 - 3,213명 중 75.5%가 학업·진로 탐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학업 중단 후 겪는 어려움으로 진로 찾기를 2위(28%)로 뽑을 만큼 이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⁴²⁾ .

구분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찾기 어려움	없음	의욕없음 (무기력)	부모와의 갈등	일을 구하기 어려움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
2015년	42.9	28.8	25.8	19.7	26.3	19.9	14.4
2018년	39.6	28.0	26.9	24.0	23.9	18.1	15.6

정책과제

-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력 확대
 - 인력보충을 통한 실무자 업무 분산
 - 다양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 확충

42) 윤철경 외 4명,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2쪽에서 인용.

모니터링 결과

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인력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지자체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일환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 확대
 -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HOME > 감사뉴스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개 첫 지정... 재정지원

▲ 이미속 기자 | © 승인 2020.03.24 20:49



[한국강사신문 이미속 기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에서 매년 1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교육청 관할)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 그림 1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관련 기사 (한국강사신문, 2020.3.24.)

5-1-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초생활지원 제도 도입·운용

제안배경

- 최근 초·중등교육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임.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 급식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상급식 혜택은 물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됨.
-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확산 및 획일화되지 못한 상황임.
 - 전국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약 1%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대안학교 재학생 혹은 지원센터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만 펼침.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도 함.

정책과제

- ㉕ 중앙정부 차원 체계 확립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
 - 제도 획일화를 통한 전국 시행 운영 체계화
 -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개정(대안학교 추가) 검토

모니터링 결과

- ㉕ 중앙정부 차원 체계 확립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 <교육부, 부분이행>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대상 확대
 -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 시행
 - 비인가 대안학교 : 지자체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시행
 - 초·중등교육법 ‘각종학교’ 내 대안학교 규정
 - 제2조 제5호의 각종학교 내 포함
 - 제60조의 3 대안학교 규정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혜택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 가능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 등록 2019.11.21 19:54:47 | 20면



교육청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학교급식법에서는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제한하고 있어 대안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안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서 급식비를 보조하는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는 단체 후원이나 개인 부담 등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 그림 14 |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기사 (경기신문, 2019.11.21.)

5-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권리 확대

5-2-1. 꿈드림 멘토 인원 확충

제안배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교사 멘토단 인원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 및 수능 지원을 위해 교사 멘토 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 기관에서도 멘토단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부족한 실정임.
 -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10~14명의 멘토단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처럼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멘토단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정책과제

- 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멘토단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 멘토단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시행
 - 퇴직 교사 인력풀 등을 활용한 교사 멘토단 구성 및 지원

모니터링 결과

- 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멘토단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퇴직 교사 인력풀을 활용한 교사 멘토단 구성 및 확대
 - 각 시·도교육청별 자율적 운영으로 전국 단위 미시행

5-2-2.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제안배경

-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고사 응시 자격대상자의 경우 현행 정책상 기존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검정고시 지원자에 한하여 자격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고시 응시 대상자가 될 수 없을뿐더러 모의고사 응시를 하려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고교 2학년 하반기(8월) 시작 무렵에 자퇴를 한 학생의 경우 다음해 3월과 6월에 실시되는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예외사항을 두어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고사 응시 자격 요건 재설정을 요구하고자함.

정책과제

- ㉞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습지원 재구조화와 관리시스템 구축
 - 고교 2학년 상반기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 밖 센터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3월부터 시행되는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부여

모니터링 결과

- ㉞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습지원 재구조화와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부, 불수용>

6

특별과제

6-1-1.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

제안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가족 정책실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등이 있음. 이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청소년, 가족 전반의 업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수차례 진행된 바 있음. 하지만 이는 번번이 실패했고, 특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정책과제로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함.⁴³⁾
- 보건복지부(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 및 고용노동부(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 등 다른 부처의 경우 핵심적인 업무를 부처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핵심적인 업무인 청소년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이 국가의 한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계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명칭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임.

정책과제

- Ⓣ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포함
 - 현재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개편

모니터링 결과

- Ⓣ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포함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 부처 명칭 개정을 위한 법 개정 참여

43) 정은진·김기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2018, 한국청소년연구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행인: 이광호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02-330-2800(대)

인쇄처: 한결엠
